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고 있는 김포가 5년 전인 1998년 4월 1일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는 김포시가 글자 그대로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임을 가슴 설레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평화와 통일의 전진도시”이자 “동북아 중심의 발전과 번영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축복의 땅에서 태어나 자라온 우리의 삶의 터전 김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세계 속의 김포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시민 각자가 모두 그 자리에서 김포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소망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오던 중에 지난 5월 9일 정부는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김포시에 신도시가 480만평이 개발되고, 양곡택지와 마송택지·장기택지·양촌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입인구가 현재 인구의 2배가 넘는 45만 명에 달함으로써 우선 당장 기존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익 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신도시개발지구로 편입된 주민 대부분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손만대로 피땀 흘려 가꾸어온 농토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평생 몸담아온 지역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과 충격은 감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더욱 국가가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이 평소 꿈꾸어온 신도시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함이 도리이겠거늘 과거 신도시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현행 신도시 추진방식은 오히려 당초의 계획의도와는 판이한 결과를 유발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도시 개발정책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이 성공하느냐의 요체는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신도시개발인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을 때 최근 신도시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가 장기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험값 보상이 책정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

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향후 개발지구 내의 주민에게 정부에서 약속하는 신도시 개발의 어떠한 반사이익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발지구 책정 시 지역실정을 전혀 도외시킨 채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을 그어 수백년동안 이웃하며 오순도순 살아왔던 선량하고 성실한 지역주민을 하루아침에 갈라서게 하여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지구와 주공단지 이외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축행위를 제한 받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면 그 누가 이런 부당하고 부적절한 개발정책에 승복할 것이며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김포 신도시 개발예정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운양지역부터 학운지역은 그동안 남북대치에 따른 제2방어선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안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경기도 도내의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이미 노출되었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재발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완벽하게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초 건설된 기존 신도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졸속추진으로 인한 전자재 파동과 부실시공, 주변지역 난개발과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임주가구 수 증가로 도로·교육시설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돌이켜 볼 때 김포시 신도시 개발계획이 이러한 기존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각론적인 개별 실천방안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신도시개발 접근방식이 '90년대식의 주택공급 물량확대가 아닌 글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자족적 전원도시로서 개발지구 편입된 지역이나 편입되지 않은 지역을 불문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참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신도시 개발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각계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전문가와 수 차례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교환을 나눈 결과 김포시 신도시개발 및 양곡·마송택지개발과 양촌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김포시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김포 신도시 개발 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김포 신도시 개발사업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 조화를 이루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1. 김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민의 의사가 적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1. 개발지구 편입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밝혀 달라.
1. 도로·교통 및 교육·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밝혀 달라.
1. 택지보상 시 공시지가에 의한 헐값 보상이 아니라 시가에 따른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라.
1.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장·단기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밝혀 달라.
1. 제2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강을 접한 운양지역에서부터 석모·양곡·구래리를 거친 학운지역이 신도시 개발 시 안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밝혀 달라.
1. 편입용지와 미 편입용지 간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구획을 재정비하여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서로 손을 잡고 신도시 주공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27일

김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